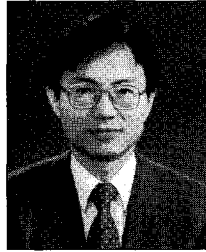


## 수월성 교육시장의 육성과 경쟁체제의 도입



윤세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장기교육정책의 하나로 대학교육의 자율화와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계기로 새해에는 우리나라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단한 생각을 경쟁법의 관점에서 적어 본다.

최근의 WTO 체제에서의 서비스시장의 지속적 개방과 이에 따른 세계화에 따라 인력시장과 교육시장에도 국경을 초월한 경쟁체제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한국기업을 포함한 다국적기업들이 인도에 IT 서비스를, 그리고 중국에는 제조업을 outsourcing하는 현상이나, 국내의 저임금업종은 동남아 등지에서 온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반면에 투자은행업이나 고급기술직과 같은 고임금업종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외국인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현상을 보면 인력시장이 세계화되고 여기에 치열한 경쟁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산업의 수직적 측면에서 인력시장의 전단계라 할 수 있는 교육시장에도 개방과 세계화의 바람은 거세게 불어와 수많은 국내 유학생들이 외국 학교로 유학을 가고 있고 국내에도 외국인이 운영하는 학교가 곧 들어올 전망이다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면 국내의 근로자들이나 조만간 인력시장에 진출할 학생들이 당면한 문제가 쉽게 보인다. 그것은 국내 근로자들이나 예비근로자라 할 국내 학생들의 입지가 국내 외에서 고임금업종과 저임금업종을 모두 외국인들(더 정확히는 외국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에게 빼앗기고 그 중간의 숙련공 내지 단순사무직 정도의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임금수준에 비추어 국내 근로자들이 저임금업종을 회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면 문제는 고임금업종에서 (예비근로자들을 포함한) 국내 근로자들이 어떻게 입지를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고임금업종은 수월성 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에게만 개방된 업종이므로 결국 문제는 어떻게 국내 학생들에게 수월성 교육을 잘 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국내 교육시장은 아직도 과거 인력시장과 교육시장이 폐쇄되어 있던 때나 마찬가지로 공급자 중심의 - 공급자에 의한, 공급자를 위한 - 일종의 카르텔체제 내지 비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점증하는 인력시장과 교육시장에서의 경쟁압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교육시장이 이러한 비경쟁체제를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고등교육의 해외도피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고임금업종 종사자들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고등교육을 받았고 그 자녀들도 해외에 유학을 시키고 있어 국내 고등교육에는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결과 교육의 질도 향상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해외로만 나가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그 동안 국내 교육이 평준화에 몰두하여 수월성 교육을 소홀히 하는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월성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나라로 자녀들을 유학 보내는 현상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방치한다면 국내 교육시장에 대한 교육수요자들의 투자와 우수한 학생들의 공급을 감소시켜 우리나라에서도 고등교육의 해외도피라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해외유학을 갈 경제적 여유가 없는 중산층 내지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경제정의는 물론 사회정의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암울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수월성 교육의 수요를 국내에서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유학을 갈 수 없는 중산층 내지 저소득층의 자녀들도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시장에서의 경쟁요소를 강화하여 수월성 교육의 분야에서도 경쟁이 증가하고 그 결과 교육의 질이 개선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교육시장에서의 경쟁축진을 도모할 수 있을까?

첫째, 교육공급자인 학교와 학교교육의 1차적 수요자라 할 수 있는 학생 내지는 학부모들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교육의 방법론은 물론 내용에 관한 자율적 결정권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사전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학교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교육의 성과로 경쟁하고 판단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은 과잉규제는 사실상 경쟁수단을 봉쇄함으로써 공급자들의 현실안주 카르텔을 쉽게 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시장 개방을 앞당기고 철저히 하여 국내 교육시장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미 외국,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고등교육시장을 대상으로 한 국제적 교육서비스의 제공에 매우 적극적인데 국내에서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점점 우리 교육수요자들의 교육투자가 외국으로 흘러나가 국내 교육시장은 더욱 더 후진적 상태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수요자들을 이러한 교육시장 개편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이해시켜 교육시장의 경쟁촉진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와 같은 비경쟁적 교육시장에서 최대의 피해자는 중산층 이하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교육시장의 경쟁화는 고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정책으로서 계층간 이동을 막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정치적 오해를 불식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교육시장의 경쟁촉진은 어려울 것이다.

교육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불신에 비추어 이러한 모든 과제는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공급자들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쟁촉진을 본업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쟁정책 담당자들이 교육시장도 경쟁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 국민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교육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을유년 벽두의 경쟁저널지에 이를 신는 소리가 여기에 있다. **경쟁저널**